

민주,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처리 속도전

오늘 법사위 의결후 16일 본회의의 '與 지적 수정, 반대 명분 사라져' 국힘 "수사범위·대상·기간 과도" '내란 국조특위' 이번주부터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조건을 붙여가며 지연 전략을 펼 경우, 자체 시간표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첫 번째 내란특검이 지난 8일 폐기되자 하루만에 두 번째 법안을 재발의하고, 법제

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까지 끝마쳤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졌다.

이번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기존안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야당 비토권을 담지 않아 여당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했다.

특검 수사인력도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기간 역시 가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가 추가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만큼 여당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으며 법안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포장만 바꾼 박스같이 특검(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이 과도하며, 특히 외환유치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 내란 선전·선동죄도 수사가 가능한 점, 가장 150일에 달하는 수사 기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기간은 특검 정국 속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당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 협상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짠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마련해 이르면 13일 당내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언론은 국민의힘이 수사범위를 '계엄 선포 후 6시간'으로 제한한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해명했다.

민주당은 법안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일정 협의를 요청한 만큼, 14일에는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내란 국조특위는 14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 대상으로 업무 보고가 이뤄진다.

기관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광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73명을 채택했다.

오는 22일과 2월 4·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21일과 2월 5일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국조특위는 2월13일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탄핵 심판'에도 올해 연봉 올라

3% 오른 2억6200만원

올해 윤석열 대통령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00만원으로 결정됐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 가량의 월급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윤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현재 심리가 가장 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최대 1억3098만원, 세후 87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으로, 역시 급여는 그대로 지급돼 세전 기준 1696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일각에선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등의 내용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종준 前경호처장, 국수본 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진욱 "민생지키기 2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12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립하는 내용의 '민생지키기 2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및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중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를 '영세소



상공인'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맞춤형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송부된 사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개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문금주, 민생 소통 '금주의 복덕방' 문 열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지난 11일 고흥 연락사무소에서 고흥 군민과 지방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금주의 복덕방-고흥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군민들은 △농업에 사용되는 지게차의 농기계 분류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령·규정 개정 △자영업 피해 관련 피해 보상 마련 △청년농업정책지원사업 건의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 민원을 제기했다.

'금주의 복덕방'은 지역민에게 복과 덕



을 가져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현장중심·지역밀착형' 민생소통 활동이다.

문 의원은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4개 지역구에서 군민의 애로사항과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의원은 "민생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카톡 검열' 논란에 "내란 선동은 수사해야"

"허위사실 유포 수사 요구 의미" 국힘 "전체주의적 발상"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당의 방침에 대해 "법률에 위배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극히 일부 유투버들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조직적으로 선동

할 뿐만 아니라 국현 문란,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은 이날 여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임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이나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를 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유투버 6명을 추가 고발하며 SNS 등을 통해 내

란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을 거론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냐며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대변인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백혜련 "육본 장교들 계엄해제 2시간 뒤 합참행"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출발한 것을 확인했다며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날 육군본부에서 받은

당시 출동 상황 자료에 따르면,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인 A소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7분 비화폰으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았다.

합참 인원이 부족하다며 지원 인력을 서울로 이동시키라는 지시였다.

이에 육본 참모 34명은 계엄 선포 이틀

날인 4일 오전 3시 3분께 대형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 충남 계룡대를 출발해 용산구에 있는 합참을 향해 떠났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백 의원은 "계엄사 구성을 위해 올라오던 육본 장교들의 부대 복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뤄진 것은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